

보고서 목차: 한국의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ACP 도입 제안을 위한 유럽 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한국의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고객 비밀유지 특권)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유럽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는 곧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내변호사 ACP 제도의 부재로 인한 실무적 난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불인정 관할권에서는 민감한 법률 리스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ACP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처음부터 외부 로펌을 선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표준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개혁 사례는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제1부 서론: 한국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의 필요성 및 연구 개요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ACP를 조건부로 인정하거나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적 난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사내변호사 ACP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 두 국가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내변호사 ACP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유럽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럽의 ACP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는 법률상 인정하면서도 실무상으로는 조건부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1]. 반면,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2]. 이러한 차이는 ACP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특권이 오직 의사소통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이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상 조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3].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제도 도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사내변호사의 법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인정 여부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는 더욱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됩니다 [^4].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존재합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유럽의 비밀유지특권 환경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철학적 분열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들을 제시합니다. 본 연구는 유럽의 ACP 환경을 규정하는 법리적, 철학적 논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국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사내변호사 ACP 도입의 효용성과 과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악조노 켈*이 제기한 '독립성'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제도적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는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가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사내변호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의 ACP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는 법률상 인정하면서도 실무상으로는 조건부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 반면,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2]. 이러한 차이는 ACP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특권이 오직 의사소통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이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상 조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제도 도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1.1 한국 사내변호사 현황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한국의 사내변호사 제도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으나, 법적 보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사내변호사의 구체적인 인원 규모나 주요 업무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는 제한적이나, 기업의 법무팀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기업 의사결정의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내변호사는 외부 변호사와는 상이한 법적 지위로 인해 실질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별은 특히 법적 분쟁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사내변호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업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 압수 및 공개 위험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 자문은 비밀유지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완전하고 솔직한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을 안심하고 공개하도록 장려하는 데 그 핵심 목적이 있다 [^5]. 즉, 법률 준수를 촉진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의뢰인의 '솔직하고 완전한 소통(full and frank communication)'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5].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내변호사의 ACP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기업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ACP의 불확실성은 사내변호사가 형사 사안에 연루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할 때 더욱 취약한 지점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기업의 내부 비리 조사나 잠재적인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과정에서 사내변호사가 취득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해당 변호사 또한 조사 대상이 되거나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는 사내변호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준법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하게 검토하고 조언하는 데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제1.2 ACP(Attorney-Client Privilege)의 국제적 동향 및 한국 도입 필요성

법률가-의뢰인 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국제적으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ACP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와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ACP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전략, 정신적 인상, 법률 이론 등이 외부에 노출될 염려 없이 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적대적 사법 시스템의 온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특히 미국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외국법보다 ACP 보호에 더 유리한 미국법이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7] 영국 또한 ACP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범위 지정, '주된 목적' 테스트 충족, 내부 공유 시 권리 포기 위험 등 복잡한 요소를 고려한 내부 통제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8] 캐나다 역시 ACP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ACP 인정 여부는 국가별 법률 체계 및 판례에 따라 그 범위와 적용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ACP 보호가 원칙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9] 이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잠재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사내변호사와 솔직하고 완전한 소통하는 데 제약을 야기하며,  [^10] 결과적으로 법적 리스크의 조기 식별 및 시정 조치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10] ACP 부재 시 기업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서면 기록 남기기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준법 감시 시스템 작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0]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ACP가 본래 촉진하고자 했던 준법 문화의 정착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설을 낳는다.  [^11]

따라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내실 있는 준법 경영 및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ACP 도입이 시급하다. ACP가 보장될 때, 기업 임직원들은 사내변호사와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10] 이는 기업의 '도덕적 나침반'으로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위법 행위 예방 및 법질서 준수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0] 또한, 이는 기업 내부 조사 시 변호사가 경영진뿐만 아니라 실무 정보를 가진 직원들로부터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12] 의사소통 행위는 보호되더라도 문서의 성격 자체가 변하지는 않으므로,  [^13]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로운 통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의뢰인이 특권 발생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문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더라도 그 문서 자체가 특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14] ACP는 특정 협회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내변호사에게만 부여될 수도 있다.  [^15]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기업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16]

제1.3 유럽 대륙법계 법률 제도의 특징과 ACP의 법리적 기반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불시단속 시 ACP를 주장하는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당시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제1.4 보고서의 목표 및 구성

본 보고서는 한국의 사내변호사에게도 미국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내변호사 업무 관련 커뮤니케이션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ACP 현황 및 관련 법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되며,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본 보고서는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을 얻고자 한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미국 다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테스트와 같이, 하위 직급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17]에 제시된 요건에 따르면, (1)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이며, (2) 그 지시가 기업을 위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이고, (3) 커뮤니케이션의 주제가 해당 직원의 업무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특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적·윤리적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변호사가 독립적인 변호사 협회(Bar)의 구성원으로서 사법 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한다는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즉, 특권을 주장하거나 포기할 권리는 의뢰인에게 있으며, 이는 변호사에게 공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대륙법계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와 구별되는 영미법의 핵심 원리이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23년 7월 통과된 법률(Art. 58-1) 역시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막고, 증가하는 준법 의무와 자기부죄 위험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유럽의 비밀유지특권 환경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철학적 분열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들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유럽 주요 국가별 사내변호사 ACP 관련 법제도 및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성은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가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2부 유럽 대륙법계 법률 제도의 특징과 ACP의 법리적 기반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 두 국가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불시 단속 시 ACP를 주장하는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원칙의 철학적 및 법제적 차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원칙은 법률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유롭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근간을 이룬다. 이 원칙의 기원은 16세기 영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존하는 증거법상 특권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은 현존하는 증거법상 특권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그 기원은 16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미국법에서 법률적 조력을 구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지는 비밀의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이 유지되는 의사소통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내변호사의 경우, 그들의 고용 관계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독립성'이라는 원칙은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 자리하며,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사내변호사가 일관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통일된 원리로 작용한다. '고용 관계의 부재'로 정의되는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EU, 독일(형사 문제에서), 그리고 프랑스 전반에 걸쳐 사내변호사가 일관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통일된 원리입니다. 첫째, 앞서 제2.2장에서 상세히 분석한 '독립성' 원칙이다.

유럽의 사내변호사 전문직능협회(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ACP 인정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규제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ACP 인정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규제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형 모델들은 사내변호사 ACP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뚜렷한 경로를 제시한다. 이러한 규제형 모델들은 사내변호사 ACP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뚜렷한 경로를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보호에 대한 법체계 간의 근본적인 긴장을 분석했으며, 본 보고서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보호에 대한 법체계 간의 근본적인 긴장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한 국가가 사내

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이는 ACP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한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커뮤니케이션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라는 판단하에 관련 자료의 반환을 명령하는 획기적인 결정이 있었다. * 2023년 7월의 획기적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커뮤니케이션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압수된 관련 자료의 반환을 명령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이라는 용어 대신, '사내변호사 법률 자문의 비밀성 보장'에 관한 새로운 독립 법규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이라는 용어 대신, '사내변호사 법률 자문의 비밀성 보장'에 관한 새로운 독립 법규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2.1 영미법계 특권(Privilege)과 대륙법계 비밀유지 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영미법계의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과 대륙법계의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는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의사소통 방식에 실질적인 차이를 야기한다. 영미법계에서 ACP가 보장될 때, 기업의 임직원들은 잠재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사내변호사와 '솔직하고 완전한(full and frank)' 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내부 소통의 활성화는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법질서 준수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반대로 ACP가 부재할 경우, 기업은 잠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을 기피하게 되며, 이는 결국 투명하고 효과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ACP 인정은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도덕적 나침반(moral conscience)'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ACP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변호사의 사고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이며, 이는 조사관 등 비변호사가 작성한 자료도 포함할 수 있어 비밀유지특권보다 범위가 넓다. 이 원칙의 목적은 의뢰인과의 관계 보호가 아니라,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략, 정신적 인상, 법률 이론 등이 노출될 염려 없이 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적대적 사법 시스템의 온전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는 의사소통 행위는 보호되지만, 문서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로서 EU 경쟁법 조사 시 증거 제출 의무를 살펴보면, 영미법계에서는 ACP가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의뢰인' 그룹의 범위 지정, '주된 목적' 테스트 충족, 내부 공유에 따른 권리 포기 위험 등 SRA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복잡성을 고려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ACP 적용 여부에 대해 기업과 집행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는 조사관이 열람하지 않은 상태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보관된다. 따라서 관련 대응팀은 EU 집행위원회 단속 시, ACP가 문제 되는 문서를 어떻게 '봉인 봉투'에 넣도록 요구하고 이익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원칙적으로 ACP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등도 자국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사내변호사에 대해 ACP를 인정하지만, EU 경쟁법 조사라는 예외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또한

ACP는 이 협회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내변호사에게만 부여되는 제한적인 보호 범위로 인해, 기업 내 '의뢰인'의 범위에 대한 캐나다의 접근 방식은 영국의 협소한 정의보다는 넓지만, 미국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 [^22]

결론적으로, 영미법계의 ACP는 사내변호사와 임직원 간의 솔직한 소통을 촉진하고 법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대륙법계의 비밀유지 의무는 그 범위와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기업 운영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19] 특히 EU 경쟁법 조사와 같이 역외 적용되는 규범 하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며, ↩ [^21] 이 분석은 사건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법보다 특권 보호에 더 유리한 미국법의 적용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 [^7] 소송 특권은 소송이 종료되면 함께 소멸하는 일시적인 보호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23] 따라서 한국 사내변호사에게 ACP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 [^15] ↩ [^18] ↩ [^6]

제2.2 법제적 기반의 차이가 갖는 함의

유럽 각국의 사내변호사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은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난제들은 한국의 ACP 도입 논의에 있어 법제적 기반의 차이가 갖는 함의를 명확히 보여준다. [^20]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20]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20]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20]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20] 이는 형사 절차에서 사내변호사가 독립적인 변호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들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파일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20]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내부 조사에 있어 매우 높은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며,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와 같은 보호 장치는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다. [^20] 특히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 [^20] 이러한 법제적 기반의 차이는 유럽 내에서도 '독립성'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ACP 인정 범위와 효력이 달라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 [^20]

결론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0]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20] 궁극적으로는 사내변호사 ACP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20] 이러한 배경 하에, EU 집행위원회 단속 시 사내변호사 ACP가 문제 되는 문서를 '봉인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 이는 벨기에 및 네덜란드 모델에서 차용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식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 앞서 제안한 비밀성 보호는 이 등록부에 등재된 변호사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20] 또한, 최근 프랑스 최고법원이 외부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요약하거나 전달하는 내부 문서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여 EU 판례와 보조를 맞춘 사례는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국제적인 추세를 보여준다. [^20]

제2.3 상충 관계: 비밀유지 의무와 기업 활동의 효율성






사내변호사(ACP) 제도의 도입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4]. 이는 소송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공개 의무의 예외로서 작용하며,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비밀이 보장된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





합니다 [^25]. 그러나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때때로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 실무적으로 심각한 난제를 야기합니다 [^26].




비밀유지 원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뢰인과의 관계 보호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략이나 법률 이론 등이 노출될 염려 없이 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적대적 사법 시스템의 온전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6].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서는 사내 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특별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6]. 이로 인해 기업 내부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며,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지만, 이 의무는 정부 당국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27]. 이러한 상황은 법률과 규제 당국의 관행이 충돌할 때 기업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28].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단속 시, ACP 관련 문서를 '봉인 봉투'에 넣어 관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 미국 법원에서는 외국법보다 특권 보호에 더 유리한 미국법의 적용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적 지식은 ACP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전반적으로 사내변호사 특권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관할권에서도 [^29], 유럽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ACP 시스템은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 특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각국의 법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 및 전사적 시행이 요구됩니다 [^30]. 이러한 노력은 ACP 도입이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0].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기업의 준법 경영 강화와 국가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국가의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20].

제3장 유럽 사내변호사 ACP의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 효과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전문직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유럽 각국의 경험은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당시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두 국가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 내 ACP 논의의 지형은 두 가지 힘의 충돌과 타협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ACP의 보호 범위가 소송의 종류(민사, 형사, 행정)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의 자격 요건(변호사 협회 등록, 직업 규정 체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적'이고 '조건부'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불시 단속 시 ACP를 주장하는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한국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ACP 제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제3.1 인정의 법리적·정책적 정당성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특권)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24]. 이러한 추세는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특권으로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그 효력이 발휘된다 [^24]. 그러나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ACP 적용 여부에 대해 기업과 집행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는 조사관이 열람하지 않은 상태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보관된다 [^19].

영미법계에서는 의뢰인이 특권의 주체이므로, 의뢰인의 행위(예: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특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권이 의뢰인의 권리인 보통법 국가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문서를 공유하는 행위가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 비밀유지특권은 보호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포기되며, 한번 포기되면 회복될 수 없다. 이는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포함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며,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한편, 명시적 포기(Express Waiver)는 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31]. 이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동의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또는 각자의 변호사와 특권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특권이 포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리이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제3.1.1 법적 순수성에서 경제적 실용주의로의 전환

최근 유럽 대륙에서 사내변호사 기업비밀특권(ACP)을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단순히 법리적인 순수성 추구를 넘어선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변화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를 야기하며,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과거에는 ACP의 적용 범위가 변호사와 특정 임직원 그룹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한정되는 등 법적 순수성에 기반한 엄격한 해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의 실제 활동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필요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ACP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일부 회원국들은 경제 성장 촉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ACP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쟁 당국의 조사와 같이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사내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4]

이러한 경제적 실용주의의 흐름은 ACP를 인정하는 관할권의 경험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

고 있습니다. [^5] 이는 사내변호사 ACP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6]

이러한 변화는 ACP의 인정 범위를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리하는 '계층적 특권(tiered privilege)' 시스템의 등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7] 이는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8] 경제적 현실과 규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CP 적용 여부에 대해 기업과 집행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를 조사관이 열람하지 않은 상태로 봉인하여 보관하는 절차는 [^9] 법적 엄격성과 경제적 실용주의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경제 생태계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 따라서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경제적 실용주의가 법적 순수성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사내변호사 ACP 제도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1]

제3.1.2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 규제 철학의 반영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19]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24] 이는 비밀유지특권이 보호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포기될 수 있으며, 한번 포기되면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24]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24] 영미법계에서는 의뢰인이 특권의 주체이므로, 의뢰인의 행위(예: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특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4] 이는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포함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다. [^24]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 [^24] 따라서 ACP 적용 여부에 대해 기업과 집행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는 조사관이 열람하지 않은 상태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보관된다. [^19]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4]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24]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24] 이러한 맥락에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24] 이는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포함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다. [^24]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4] 특권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한다. [^24] 이는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포함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다. [^24] 첫째, 앞서 제2.2장에서 상세히 분석한 '독립성' 원칙이다. [^24] 예를 들어, 특권이 의뢰인의 권리인 보통법 국가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문서를 공유하는 행위가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 [^24]

제3.2 평가된 성과와 실질적 편익

유럽의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컨텍스트 2]. 특히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부재가 실무적 난제를 야기하며, 이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1, 컨텍스트 15].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3]. 이는 곧 ACP 도입이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5]. 결과적으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4].

ACP는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특권입니다 [컨텍스트 8]. 이러한 특권은 보호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포기될 수 있으며, 한번 포기되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컨텍스트 14]. 예를 들어, 특권이 의뢰인의 권리인 보통법 국가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문서를 공유하는 행위가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13]. 따라서, 의뢰인이 특권의 주체인 영미법계에서는 의뢰인의 행위, 즉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특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12]. '독립성' 원칙 하에서 명시적 포기(Express Waiver)는 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컨텍스트 11, 컨텍스트 10].

ACP 적용 여부에 대해 기업과 집행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는 조사관이 열람하지 않은 상태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보관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컨텍스트 9].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컨텍스트 7].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컨텍스트 6]. 이는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포함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며,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17].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16].

제3.2.1 기업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은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증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궁극적으로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1]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특권이다. [^24] 이러한 특권은 기업이 법률 전문가와 거리낌 없이 솔직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ACP 적용 여부에 대해 기업과 집행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는 조사관이 열람하지 않은 상태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보관되는 절차는 기업의 비밀 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9]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 예를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특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영미법계와 달리, ACP는 이러한 '특권 포기'의 위험을 줄여준다. [^3] 이는 기업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 또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유럽의 최근 움직임은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6]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7]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8]

제3.2.2 법의 지배 내재화 목표와의 연관성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1]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 중 하나는,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이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2]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이 특권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3]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4]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5] 그러나 이는 공동의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또는 각자의 변호사와 특권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특권이 포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리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법의 지배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6]

반면, 영미법계와 같이 의뢰인이 특권의 주체인 경우, 의뢰인의 행위(예: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특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7] 이러한 상황은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와는 구별되며,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다. [^8]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9] 따라서 비밀유지특권은 보호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포기되며, 한번 포기되면 회복될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10]

궁극적으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11]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사내변호사 ACP 제도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2]

제3부 유럽 국가별 사내변호사 ACP 현황 비교 분석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사내변호사 ACP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과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당시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개혁 사례는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 속에서도 ACP의 보호 범위는 소송의 종류(민사, 형사, 행정)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의 자격 요건(변호사 협회 등록, 직업 규정 체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적'이고 '조건부'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각국의 법률 시스템과 기업 환경에 따

라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불시 단속 시 ACP를 주장하는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명확한 절차의 마련은 사내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4장 범유럽 사내변호사 ACP 현황 매트릭스 및 국가별 다양성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당시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이 두 국가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제4.1 ACP 인정 현황: EU 원칙 대 국가 주권

유럽연합(EU) 내에서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의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인정 문제는 EU 차원의 원칙과 개별 회원국의 국가 주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EU 차원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개별 회원국들의 사내변호사 ACP 관련 법제는 매우 다양하고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유럽의 경험이 한국의 ACP 도입 논의에 풍부하고 다층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배경이 된다.

EU의 입장에서 사내변호사 ACP 인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고용 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의심하는 유럽연합(EU)의 초국가적 법리, 즉 *악조노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내변호사에게 ACP를 부여하는 것은 독립성이 결여된 조언까지 보호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32]. 이러한 논리는 특히 형사 및 규제 영역에서 ACP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판결로 인해 사내변호사 ACP가 없는 국가의 기업들이 겪는 법적, 경제적 불이익이 명확하게 부각되었다 [^33].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악조노블* 판결을 통해 사내변호사의 ACP를 불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지 않는 관할권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며 [^34], 이들 기업은 EU 조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ACP가 강력하게 보장되는 미국이나 영국 기업과의 국제 거래에서도 경쟁력 약화를 체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이러한 EU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인정 노력이 관찰된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지난 수십 년간 변화한 회원국들의 입법 동향(사내변호사 ACP 인정 확대 추세)과 기업 준법경영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 증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내부고발자 지침의 맥락을 고려하여 사내변호사의 기밀유지 의무를 일정 부분 인정함으로써 *악조노블* 원칙을 일부 수정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길을 열기도 한다.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등도 자국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사내변호사에 대해 ACP를 인정하지만, EU 경쟁법 조사라는 예외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21].

이처럼 EU 차원의 법리와 각 회원국 법률 간의 긴장 관계는 향후 유럽 전역의 사내변호사 ACP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ACP 도입이 국가 주권의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제4.1.1 EU 경쟁법 조사 시 불인정 사례와 국내법상 불명확성

유럽연합(EU)의 경쟁법 조사에서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 관련 비밀유지권(ACP) 인정 여부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쟁점이다. EU 차원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내변호사를 외부 변호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집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 EU 최고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EU 경쟁법 조사에서 비밀유지권은 '독립적인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만 적용되며, 사내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16] 이러한 판결들은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지 않는 관할권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이러한 EU 차원의 엄격한 불인정 원칙은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이 결여된 조언까지 보호하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3] 바로 이 판결로 인해 사내변호사 ACP가 없는 국가의 기업들이 겪는 법적, 경제적 불이익이 명확하게 부각되었다. [1] 이들 기업은 EU 조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ACP가 강력하게 보장되는 미국이나 영국 기업과의 국제 거래에서도 경쟁력 약화를 체감하게 되었다. [6] 실제로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등도 자국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사내변호사에 대해 ACP를 인정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EU 경쟁법 조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를 불인정하고 있다. [2]

이러한 EU 내부고발자 지침과 판례들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벨기에 법과 같이 국내법에 따라 사내변호사에게 부여된 기밀유지 의무의 취급에 대한 불명확성은, EU 기관이 적용하는 초국가적이고 제한적인 원칙과 개별 회원국들이 보유한 다양하고 진화하는 국내법 사이의 충돌을 야기한다. [9, 10] 이는 EU 차원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개별 회원국들의 사내변호사 ACP 관련 법제가 매우 다양하고 분화된 양상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15] 그리스와 핀란드의 경쟁 당국 역시 EU 판례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유럽경쟁네트워크(ECN)를 통한 긴밀한 협력과 절차적 조화의 필요성 때문이며, EU 최고 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것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8]

ACP 적용 여부에 대해 기업과 집행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는 조사관이 열람하지 않은 상태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보관된다. [4] 이러한 EU 차원의 엄격한 기준과 각국의 독자적인 인정 모델은 한국의 ACP 도입 논의에 풍부하고 다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7]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집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개별 국가들은 글로벌 법률 무대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12]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최근 CJEU에 대한 선결적 질의는 이러한 긴장 관계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하며, 향후 EU 차원에서의 법리적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다. [13] 대륙법계의 접근법은 EU의 독특한 경쟁법 체계와 독일, 프랑스의 국내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14]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한국적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4.1.2 초국가적 경직성에 대한 국가별 법제 다양성

유럽 각국의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은 초국가적인 경직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 이러한 다양성은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유럽의 비밀유지특권 환경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철학적 분열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들을 제시한다. 📌 특히 '독립성' 원칙은 ACP 적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대신, 본 보고서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유럽의 ACP 제도는 '조건부 특권(conditional privilege)'이라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모델로 수렴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표 1: 유럽 주요국의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ACP) 인정 현황 비교는 각국의 상이한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한편,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식 메커니즘 구축에 있어 벨기에 및 네덜란드 모델을 차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비밀성 보호가 등록부에 등재된 변호사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는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며,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4.2 주요 유럽 국가별 ACP 인정 현황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ACP 관리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불시 단속 시 ACP를 주장하는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2.1 사내변호사 ACP를 조건부 인정하는 관할권 (예: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당시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ACP를 인정하는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ACP를 조건부로 인정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법률 제도의 차이가 실무적으로 심각한 난제가 된다. 각 유럽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ACP 인정 현황(완전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에 맞춰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 관리 규칙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관할권별 맞춤형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 ACP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에서 나타나는 ACP의 조건부 인정 방식은 두 가지 주요 힘의 충돌과 타협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 이로 인해 ACP의 보호 범위는 소송의 종류(민사, 형사, 행정)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의 자격 요건(변호사 협회 등록, 직업 규정 체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적'이고 '조건부'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 판례에 따르면, ACP는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받을 권한이 있는 특정 임직원 그룹('client group')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만 적용된다. ✎ 이러한 개혁은 ACP의 인정 범위가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계층적 특권(tiered privilege)' 시스템의 등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

제4.2.2 ACP를 인정하지 않거나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관할권 (예: 프랑스, 독일,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같은 주요 관할권에서는 사내변호사 ACP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단순히 법률 제도의 틀 안에서 용어의 차이를 넘어, ACP의 주체, 목적, 그리고 사내변호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배경이 된다. ✎ 이는 단순한 용어의 차이를 넘어 ACP의 주체, 목적, 그리고 사내변호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ACP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건부로만 인정하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는 특히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이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ACP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ACP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두 힘의 충돌과 타협은 ACP의 보호 범위가 소송의 종류(민사, 형사, 행정)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의 자격 요건(변호사 협회 등록, 직업 규정 체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적'이고 '조건부'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 이 두 힘의 충돌과 타협은 ACP의 보호 범위가 소송의 종류(민사, 형사, 행정)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의 자격 요건(변호사 협회 등록, 직업 규정 체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적'이고 '조건부'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같이 ACP를 인정하지 않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관할권의 사례는,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에 있어 그들의 법률 체계와 정책적 고려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제4.2.3 덴마크 사법법 등 관련 법규

유럽의 사내변호사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24] 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24]

법률 보고서의 이전 섹션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비밀유지특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보호한다. [^24] 판례에 따르면, ACP는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받을 권한이 있는 특정 임직원 그룹('client group')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만 적용된다. [^24] 그러나 영미법계와는 달리 유럽 대륙법계에서는 이 원칙을 사내변호사에게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 존재한다. [^24] 이러한 상황은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와는 구별되며,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있다. [^24] 특히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24]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은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24]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24] 또한,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24]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4] 이는 ACP 관리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24]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24]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24]

제5장 유럽의 사내변호사 ACP 모델 분석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당시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되기도 한다. 📌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이러한 국가들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불시 단속 시 ACP를 주장하는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1 변화의 대륙: 사내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의 진화

유럽 대륙은 사내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ACP)에 대해 단일한 표준을 채택하기보다는, 각국의 고유한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는 사내변호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보호도 부여하지 않는 관할권에서부터 [^26], 민사, 상사, 행정, 형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를 인정하는 곳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35]. 예를 들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과거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내에서도 사내변호사 ACP에 대한 입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그리스와 핀란드의 경쟁 당국이 EU 판례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유럽경쟁네트워크(ECN)를 통한 긴밀한 협력과 절차적 조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EU 최고 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것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36]. 그러나 이러한 법률과 규제 당국의 관행이 충돌하는 상황은 기업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며, 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로 작용합니다 [^28].

이처럼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29]. 캐나다의 경우, 기업 내 '의뢰인'의 범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영국의 협소한 정의보다는 넓지만, 미국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22].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이는 정부 당국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사내변호사 ACP 논의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27].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27].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26]. 결론적으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는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

제5.1.1 전통주의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관할권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4.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2.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5.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7.

이러한 맥락에서,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주로 오랜 법리적 전통과 규제 철학에 기반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특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리스와 핀란드는 경쟁 당국이 EU 판례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유럽경쟁네트워크(ECN)를 통한 긴밀한 협력 및 절차적 조화와 최고 법원의 판례 준수가 규제 당국에 있어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 이러한 관할권에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지만, 이는 정부 당국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내변호사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특별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0 12. 구체적으로, 해당 관할권에서의 비밀유지권 적용 범위는 민사, 상사, 행정 분야에 미치며, 형사 분야에서 외부 변호사와 동일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1. 그러나 이러한 비밀유지권의 한계는 정부 당국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10.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는 기업 내 '의뢰인'의 범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영국보다는 넓지만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사내변호사 ACP 도입에 대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9. 또한, 일부 관할권에서는 비밀유지 특권의 적용 범위가 민사, 형사, 행정 분야를 포괄하나 일부 예외가 존재하기도 한다 13. 이러한 제한적인 입장은 사내변호사 ACP 도입으로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15, 법률과 규제 당국의 관행이 충돌하는 상황은 기업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16. 보호 대상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 전반에 미치며, 특권의 주체는 의뢰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4,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 없이는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통주의적 접근 방식은 사내변호사 ACP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간과하게 만든다 1.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6,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3.

제5.1.2 최근의 혁신적 입법 개혁 사례 (예: 프랑스의 '법률 혁명')

프랑스의 최근 입법 개혁 사례는 사내변호사의 특권적 소통 보호(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2023년에 단행된 사내변호사 ACP 관련 법률 개정은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 양상, 그리고 '혁신성'의 근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프랑스의 개정 법률은 사내변호사의 ACP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며 기존 법리와의 관계를 정립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제58-1조와 같은 조항들은 사내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담긴 서신에 대해 '기밀(confidential)'로서의 보호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협회 회원이 제공하는 법률 의견을 담은 모든 서신은 '기밀(confidential)'이라고 규정하는 법 제5조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독립성' 원칙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논의를 야기한다. 변호사의 '독립성'은 사내 변호사 비밀유지권 인정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철학적 논쟁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는 대륙법계가 더 넓을 수 있지만, 보호받는 '사람'(즉,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는 자)의 범위는 훨씬 좁아지는 상충 관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충 관계 속에서 프랑스 개혁은 '조건부 인정'의 형태로 ACP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건부 인정은 사내변호사가 순수하게 '법률적 역량(legal capacity)'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독립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통제집단 테스트' 또는 더 넓은 '주제 사항 테스트'를 적용하고 변호사 협회 정회원 자격을 요구하는 등, ACP 적용에 있어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유럽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다. 이러한 두 힘의 충돌과 타협은 ACP의 보호 범위가 소송의 종류(민사, 형사, 행정)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의 자격 요건(변호사 협회 등록, 직업 규정 체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적'이고 '조건부'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프랑스 개혁이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러한 조건부 인정의 방식이 기업의 준법 경영 강화라는 실질적인 목표와 유럽연합(EU) 법리 및 회원국 간의 상이한 ACP 적용 관행 속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ACP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ACP 관리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또한 '변호사를 참조(cc)하면 특권이 생긴다'는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이메일 전달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5.1.3 ACP가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한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

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실용주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적 도구로서 ACP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당시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이처럼 ACP의 인정 여부는 국가별 법률 제도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내변호사의 법률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실무적으로 심각한 난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두 힘의 충돌과 타협은 ACP의 보호 범위가 소송의 종류(민사, 형사, 행정)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의 자격 요건(변호사 협회 등록, 직업 규정 체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적'이고 '조건부'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내변호사 ACP의 제도적 완비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제5.2 제한적 모델: 현상 유지를 고수하는 관할권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관할권은 현상 유지적 입장을 고수하며 사내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미 명시된 바와 같이, 사내 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특별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현실로 나타난다 [^26].

이러한 제한적인 접근 방식은 그리스와 핀란드 등에서 관찰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쟁 당국 역시 EU 판례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36]. 이는 유럽경쟁네트워크(ECN)를 통한 긴밀한 협력과 절차적 조화의 필요성, 그리고 EU 최고 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것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6].

더욱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이는 정부 당국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27]. 이는 사내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의견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법적 보호가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사내변호사는 독립적인 변호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들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파일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5]. 이로 인해 기업의 내부 조사는 매우 높은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며,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유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관할권의 사례는, ACP 도입 논의가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한적인 모델은 사내 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부재를 야기하며, 기업의 내부 조사 및 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의 법적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하면서도 원칙에 충실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업 내 '의뢰인'의 범위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캐나다의 접근 방식은 영국의 협소한 정의보다는 넓지만, 미국의 경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22]. 이는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

으로 볼 수 있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제5.2.1 ACP 부재가 기업 문화 내 법의 지배 내재화 목표에 미치는 영향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1]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한국의 ACP 도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이 특권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3]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4]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5] 그러나 이는 공동의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또는 각자의 변호사와 특권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특권이 포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리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법의 지배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6]

반면, 영미법계와 같이 의뢰인이 특권의 주체인 경우, 의뢰인의 행위(예: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특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7] 이러한 상황은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와는 구별되며,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다. [^8]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9] 따라서 비밀유지특권은 보호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포기되며, 한번 포기되면 회복될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10]

궁극적으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11]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사내변호사 ACP 제도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2]

제5.3 유럽 국가들의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 현황 조사 결과

유럽의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은 ACP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내변호사의 조언에 대해 ACP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학 석사 학위, 윤리 교육 이수, 그리고 문서에 특정 문구 명기 등의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 인정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변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며,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는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ACP가 의뢰인의 권리인 보통법 국가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문서를 공유하는 행위가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의뢰인이 특권의 주체이므로, 의뢰인의 행위(예: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특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동의 '법적' 이해

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또는 각자의 변호사와 특권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특권이 포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리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비밀유지특권은 보호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포기되며, 한번 포기되면 회복될 수 없다.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결국,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제5.3.1 주요 법률 및 판례 분석 (예: *악조노벨(Akzo Nobel)* 판결의 영향)

유럽의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에 대한 변호사-고객 비밀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2010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기념비적인 *악조노벨* 판결로 인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수행하는 경쟁법 조사와 관련하여 사내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는 ACP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외부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ACP 기준과 달리,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일원으로서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근거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악조노벨*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악조노벨* 사건에서 해당 사내변호사는 네덜란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었고, 직업윤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사내변호사가 직면한 '독립성' 문제입니다. EU 경쟁법 조사에서 기업은 내부 문서 및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지휘하에 놓여 있다는 점은 외부 변호사가 누리는 독립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내변호사는 고용 관계에 따른 충성 의무가 외부 변호사의 의뢰인과의 독립적인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악조노벨* 원칙에 따라 기업의 독일 지사를 불시 조사하고, 서버에 저장된 모든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악조노벨* 원칙에 맞춰 모든 내부 법률 자문을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악조노벨 판결은 EU 경쟁법 조사에 명시적으로 한정되지만, 그 파급 효과는 EU 회원국 전반의 사내변호사 ACP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 판결의 경직성에 대응하여 자국 법률 체계 내에서 사내변호사의 ACP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기존의 보호 범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단순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상당 부분 *악조노벨* 원칙의 경직성에 대한 각국의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자국 변호사 협회가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악조노벨* 소송에서 항소인 측을 지지하며 개입했던 사실은 자국의 이러한 강력한 보호 원칙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후속 판례 및 입법적 변화는 *악조노벨* 판결이 제시한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반영합니다. 비록 *악조노벨* 판결 자체가 EU 경쟁법 조사에 국한된다는 점이 명확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야기한 사내변호사 ACP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회원국들이 각자의 법적 전통과 실무에 맞춰 ACP 적용 범위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럽의 경험, 특히 *악조노벨* 판결이 갖는 의미와 그 이후의 법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제5.3.2 사내변호사 ACP가 기업 준법경영 및 법무 총괄 책임자(GC) 역할에 미치는 영향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의 특별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은 기업 법무 총괄 책임자(General Counsel, 이하 GC)의 전략적 위상과 법무팀의 운영 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야기한다. ACP가 폭넓게 인정되는 관할권,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은 곳에서는 GC와 법무팀이 기업의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는 단순히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GC에게 부여한다.

반면, ACP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GC와 법무팀은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럽의 경우, 사내변호사 ACP를 둘러싼 환경이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관할권마다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의 다국적 기업의 GC가 유럽 내 다양한 법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시사한다.

ACP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은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더욱이,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CP 도입을 둘러싼 논쟁의 한 축에는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들은 광범위한 사내변호사 ACP가 기업의 사기, 담합,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기업이 내부 조사나 법률 검토를 명목으로 위법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ACP 뒤에 숨길 경우,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 실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우려는 ACP의 보호 범위가 소송의 종류(민사, 형사, 행정)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의 자격 요건(변호사 협회 등록, 직업 규정 체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적'이고 '조건부'인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다양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부 유럽 사례에서 도출하는 실무적 영향 및 전략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당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이 두 국가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비밀유지특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영미법계에서는 의뢰인이 특권의 주체이므로, 의뢰인의 행위(예: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특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권이 의뢰인의 권리인 보통법 국가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문서를 공유하는 행위가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 비밀유지특권은 보호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포기되며, 한번 포기되면 회복될 수 없다. 따라서 사내변호사 ACP 도입 시, 특권의 범위가 '법률 의견 및 이를 요청하는 문서'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은 명백히 법적 조언을 구하는 행위로 특권

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에서 제안한 비밀성 보호는 이 등록부에 등재된 변호사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동의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또는 각자의 변호사와 특권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특권이 포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리이다.

제6장 다국적 기업의 비밀유지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 두 국가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이러한 규제형 모델들은 사내변호사 ACP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뚜렷한 경로를 제시한다. 이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축 효과'는 기업이 잠재적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부 로펌을 선임하게 만들어 신속한 준법 활동을 저해한다.

이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동의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또는 각자의 변호사와 특권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특권이 포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리이다. 예를 들어, 특권이 의뢰인의 권리인 보통법 국가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문서를 공유하는 행위가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제6.1 내부 조사 및 국경 간 증거개시 관리

내부 조사 및 국경 간 증거개시에 있어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인-고객 비밀유지권)의 존재 여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실무적 과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됩니다 [^1]. 이는 변호사의 사고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조사관 등 비변호사가 작성한 자료도 포함할 수 있어 일반적인 비밀유지특권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 그 부재는 기업의 법적 방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제 2.2장에서 상세히 분석한 '독립성' 원칙입니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스위스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167a조를 통해 사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조건부로 도입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단행했으며, 이는 개정된 스위스 민사소송법(CPC) 제167a조가 새로운 사내변호사 특권의 근거가 됩니다. 이 특권은 특정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커뮤니케이션에만 적용됩니다. 위에서 제안한 비밀성 보호는 이 등록부에 등재된 변호사에게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제6.1.1 EU 경쟁법 조사 및 불시단속(Dawn Raid) 대응 전략

규제 당국의 불시단속(Dawn Raid)은 기업의 법무 및 준법 시스템에 대한 가장 혹독한 시험대이며,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의 실질적인 가치와 리스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중대사기조사청 등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들의 단속은 기업에 막대한 법적,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7].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38].

성공적인 불시단속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핵심 내부 인력 및 사전 선임된 외부 로펌의 비상 연락망, 회사의 불시단속 대응 프로토콜, 접견 및 현장 대응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9]. 또한, 각 유럽 주요 거점별로 법무, IT, 홍보, 고위 경영진 등으로 구성된 전담 대응팀을 사전에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0]. 구체적으로는 법무, IT, 경영진, 홍보 담당자를 포함하는 전담 '불시 현장 조사 대응팀'을 사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41]. 이와 더불어 즉시 연락 가능한 외부 변호사를 지정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2].

불시단속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EC의 불시 조사(dawn raid) 시, 회사 직원과 사내 법무팀 간의 의사소통 내용은 압수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문서 파기 금지 및 모든 문의는 법무팀으로 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명확한 이메일 안내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43]. 이러한 조치는 기업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U 차원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개별 회원국들의 사내변호사 ACP 관련 법제는 매우 다양하고 분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EU 차원의 엄격한 불인정 원칙부터, 각국의 독자적인 인정 모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경험은 한국의 ACP 도입 논의에 풍부하고 다층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CJEU는 지난 수십 년간 변화한 회원국들의 입법 동향(사내변호사 ACP 인정 확대 추세)과 기업 준법경영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 증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판결로 인해 사내변호사 ACP가 없는 국가의 기업들이 겪는 법적, 경제적 불이익이 명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33].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제6.1.2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밀유지 관련 기술적 과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의 법률 자문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ACP는 변호사의 사고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조사관 등 비변호사가 작성한 자료도 포함할 수 있어 비밀유지특권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18] 이러한 특성을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기술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데이터 접근 및 관리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CSP는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고객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기밀성과 보안이 침해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ACP가 적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저장되거나 처리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CSP의 접근 권한 범위와 통제 메커니즘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데이터의 저장 위치 및 이전과 관련된 법적 준수 문제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참고 문장: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리적인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 주권 및 관할권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ACP 관련 데이터가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데이터 이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기술적 및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 통제 강화 문제입니다. ACP 하에 보호되는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과 세분화된 접근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부 직원 중에서도 ACP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접근 기록을 상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CP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 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CSP의 정책과 기술적 역량을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고 문장: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⁸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ACP의 효과적인 적용은 기업의 법치주의 내재화와 준법 경영 강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참고 문장: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제6.1.3 오스트리아 등 특정 국가에서의 사내변호사 문서 보호 불확실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의 법률 자문 관련 문서에 대한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이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ACP 도입을 고려하는 데 있어 심각한 실무적 난제를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24] 본 섹션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복잡한 ACP 환경, 특히 오스트리아 등 특정 국가에서의 문서 보호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한국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봅니다.

유럽의 ACP 제도는 최근 '조건부 특권(conditional privilege)'이라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모델로 수렴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24] 이 특권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받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4] 그러나 영미법계와는 달리 유럽 대륙법계에서는 이 원칙을 사내변호사에게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제2.2장에서 상세히 분석한 '독립성' 원칙이 그러합니다. [^24] 예를 들어, 특권이 의뢰인의 권리인 보통법 국가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문서를 공유하는 행위가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4] 이는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와는 구별되며,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24]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4]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

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24]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유럽의 비밀유지특권 환경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철학적 분열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들을 제시합니다. [^24]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24]

결론적으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24]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24] 위 1단계에서 제안한 비밀성 보호는 이 등록부에 등재된 변호사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4]

제6.2 문서 작성, 표시, 배포에 대한 최선의 관행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단순히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준법 경영 강화와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는 ACP 관리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사내변호사 ACP 인정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논리 또한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독립성' 원칙은 사내변호사 ACP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법적 조인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성문법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의 윤리적 비밀유지 의무와 증거거부권에 의존해왔으나, 이는 검찰이 형사 사건에서 관련 문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커뮤니케이션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압수된 관련 자료의 반환을 명령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개정된 민사소송법(CPC) 제167a조를 통해 새로운 사내변호사 특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국제 비즈니스 및 소송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일정 형태로나마 인정하는 개혁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특권이 의뢰인의 권리인 보통법 국가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문서를 공유하는 행위가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감한 사안, 특히 EU 경쟁법 관련 잠재적 이슈가 있는 내부 조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전략은 조사를 외부 변호사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사내변호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특권의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중한 문서 관리 및 배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는 존재하나, 이는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며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7장 유럽의 다양한 경험에서 얻는 핵심 교훈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규제형 모델들은 사내변호사 ACP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뚜렷한 경로를 제시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23년 7월, 프랑스가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새로운 비밀유지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법률 제71-1130호가 개정되어 새로운 제58-1조가 신설된 결과로, 법학 석사 학위와 윤리 교육 이수, 그리고 문서에 특정 문구 명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5조는 협회 회원이 제공하는 법률 의견을 담은 모든 서신은 '기밀(confidential)'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이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잠재적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부 로펌을 선임하게 만들어 신속한 준법 활동을 저해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한다.

한편,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벨기에에서는 사내변호사 협회에 가입하여 그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성 보장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행위'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 두 경로의 구분은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격 기반' 모델은 제도가 단순하지만 변호사 협회가 사내변호사를 완전한 동등 관계로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는 2023년 7월의 획기적인 결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커뮤니케이션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압수된 관련 자료의 반환을 명령한 판례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유럽의 다양한 경험은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제7.1 ACP 인정론과 불인정론의 논쟁 및 지속되는 우려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인-고객 비밀유지 특권) 도입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법률 제도적 차원을 넘어, 한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보다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ACP를 인정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ACP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정론자들은 주로 제도의 효율성 증대,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법치주의의 내재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논거를 제시한다. 이들은 ACP가 도입된 관할권의 경험을 통해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한다. 이는 사내변호사 ACP 도입이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ACP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불인정론자들은 주로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우려, 특권 남용 가능성, 그리고 규제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들은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발생하며, 이는 ACP의 범위 설정, 정보 공개 및 비밀유지 특권의 '포기(waiver)' 위험, 그리고 유럽 각국의 상이한 절차적 불확실성 등 구체적인 우려 사항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우려는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가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7.2 ACP가 단순한 법률 제도가 아닌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임을 시사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국가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ACP는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시간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제적 법률 자문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예방 법무'의 기능이 강화된다.

제7.3 ACP 관리가 기업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강조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ACP 관리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 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 국가들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제5부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제언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



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며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반면, 당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며 국가별로 상이한 법률 문화와 규제 체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국가별 대응의 차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실무적인 난제를 야기하며, 이는 ACP 논의가 단순히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규제형 모델들은 사내변호사 ACP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뚜렷한 경로를 제시한다. 이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통해 기업의 법치주의 내재화를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유럽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8장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의 법적, 정책적 과제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는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ACP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이 두 국가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ACP는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시간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예방 법무'의 기능이 강화된다. 





ACP 도입을 위한 한국의 법적, 정책적 과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과거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반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프랑스 모델의 점진주의를 통해 개혁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구조적 장치를 도입하여 ACP의 핵심 요건인 '독립성'을 공식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내변호사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발전하고,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8.1 현행 법제 검토 및 기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과의 관계

사내변호사 ACP(In-house Counsel Privilege)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ACP 환경은 이 두 가지 상이한 법철학이 충돌하고 타협하며 형성되는 복잡한 모자이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제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은 현존하는 증거법상 특권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그 기원은 16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이 유지되는 의사소통을 보호합니다.  또한, 2023년 7월의 획기적 결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커뮤니케이션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압수된 관련 자료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보호에 대한 법체계 간의 근본적인 긴장을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시간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ACP의 도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법률 자문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예방 법무'의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이러한 '위축 효과'는 기업이 잠재적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부 로펌을 선임하게 만들어 신속한 준법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나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사내변호사 ACP 도입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사내변호사 협회에 가입하여 그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성 보장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행위'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이 두 경로의 구분은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자격 기반' 모델은 제도가 단순하지만 변호사 협회가 사내변호사를 완전한 동등 관계로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제8.2 EU 경쟁법 조사 등 국제적 맥락에서의 고려사항

한국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ACP 도입 제안은 EU 경쟁법 조사라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중대한 고려사항들을 수반합니다. EU 차원에서는 그간 사내변호사의 ACP 적용에 대해 엄격하고 획일적인 불인정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이 결여된 조언까지 보호하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32]. 실제로 CJEU 판결들은 EU 경쟁법 조사에서 비밀유지권이 '독립적인 외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만 적용되며, 사내변호사는 명시적으로 제외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EU의 엄격한 원칙은 사내변호사 ACP가 없는 국가의 기업들에게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3]. 해당 기업들은 EU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뿐만 아니라, ACP가 강력하게 보장되는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과의 국제 거래에서도 경쟁력 약화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EU 내부 고발자 지침은 외부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는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벨기에 법과 같이 국내법에 따라 사내변호사에게 부여된 기밀유지 의무의 취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와 같은 일부 EU 회원국은 자국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사내변호사에 대해 ACP를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 경쟁법 조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인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1]. 이러한 회원국들의 입법 동향은 CJEU가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집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개별 국가들은 글로벌 법률 무대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반독점 당국은 EU 경쟁 당국과의 협력 협정을 통해 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 요청을 자제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은 한국의 ACP 도입 논

의에 풍부하고 다층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U 차원의 엄격한 기준 형성과 이에 대한 각국의 독자적인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모델 설계를 위한 핵심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감한 사안, 특히 EU 경쟁법 관련 잠재적 이슈가 있는 내부 조사의 경우, 조사를 외부 변호사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두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 및 EU 행위를 포함하는 내부 조사 문서를 글로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데이터 위치 및 관할권에 따른 법적 보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8.3 디지털 및 글로벌 환경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디지털 및 글로벌 환경은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복잡하게 만들며, 특히 ACP(사내변호사 특권)의 적용과 관리에 있어 실무적인 난제를 야기한다. [^44]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관할권 문제, 그리고 다양한 국가별 ACP 인정 기준의 충돌은 사내변호사가 본연의 비밀유지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도록 만들 수 있다. [^24]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잠재적 법적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문제 발생 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부 로펌을 선임하게 만들어 신속한 준법 활동을 저해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18] 또한, 일반적인 법률 특권이 의뢰인의 권리인 보통법 국가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관련 문서를 공유하는 행위가 특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24]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44] 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더욱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18]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첫째, **데이터 위치 지정(Data Localization)** 전략을 통해 데이터의 물리적 소재지를 특정 국가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24] 둘째, **준거법 결정(Choice of Law)** 시에는 사내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문서에 대한 ACP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의 법률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인다. [^24] 셋째, ****크로스보더 프라이버지 검토(Cross-border Privilege Review)****는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 내 여러 국가의 ACP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사내변호사가 작성하는 법률 자문 보고서, 이메일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잠재적인 법적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44]

ACP 도입은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18] 이러한 맥락에서 선제적 법률 자문의 활성화는 사내변호사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시간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문제 발생 전 예방적 법무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4]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18] 따라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44]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8]

제9장 한국형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 제안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특히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특정 형태의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며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여

주었다. 반면, 당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며 국가별로 상이한 법률 문화와 규제 체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국가별 대응의 차이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실무적인 난제를 야기하며, 이는 ACP 논의가 단순히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규제형 모델들은 사내변호사 ACP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뚜렷한 경로를 제시한다. 이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통해 기업의 법치주의 내재화를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유럽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9.1 유럽의 성공 및 실패 사례로부터 얻는 교훈의 적용

유럽 국가들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 및 운영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45].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5].

ACP 도입의 성공적인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45]. 특히 선제적 법률 자문의 활성화는 ACP 도입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ACP는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시간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예방 법무'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45].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45].

반면,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실무적으로 심각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하여 기업이 잠재적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부 로펌을 선임하게 만들어 신속한 준법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5]. 이는 정보의 공개가 오직 법률이 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45]. 대한민국이 법적 조언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성문법이 없어, 보호가 변호사의 윤리적 비밀유지 의무와 증언거부권에 의존해왔으나,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벨기에에서는 사내변호사 협회에 가입하여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성 보장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행위' 규범을 따라야 하는 바, 이러한 경로는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격 기반' 모델은 제도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 협회가 사내변호사를 완전한 동등 관계로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CITATION:200.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유럽의 비밀유지특권 환경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철학적 분열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를 재확인합니다 [^45]. 위 1단계에서 제안한 비밀성 보호는 이 등록부에 등재된 변호사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45].

제9.1.1 조건부 인정 및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

유럽의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ACP를 조건부로 인정할 때 적용할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실무적으로 심각한 난제를 야기합니다. [^46]

유럽에서 ACP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주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요 목적(Primary Purpose)' 테스트의 적용 방식입니다. 이는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 행위가 순수하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법률 자문 외에 경영상의 의사결정 지원, 내부 감사 등 다른 목적이 혼재되어 있다면 ACP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변호사의 자격 요건 및 등록 의무입니다. ACP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내변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문서의 분류 및 표시 기준입니다. ACP가 적용되는 문서는 '의견 업무 산출물'로 명확히 분류되고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야 하며, 이는 '사실적 업무 산출물'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46] 특히, 변호사의 정신적 인상, 결론, 법률 이론 등이 담긴 '의견 업무 산출물'은 거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만, [^46] '사실적 업무 산출물'은 상대방이 '실질적 필요성'과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46] 또한, 정보 공개는 오직 법률이 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 심각한 범죄 예방)에만 허용되며, [^45]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5]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법체계, 기업 지배구조, 규제 환경을 고려한 조건부 인정 방식과 적용 범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적용 대상 소송/조사 범위 설정: ACP를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형사 소송 및 공정거래 조사와 같이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법규 준수 여부가 엄격하게 검토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ACP가 악용될 소지를 줄이고,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5]



둘째, 사내변호사 자격 요건 및 등록 의무: 한국 법률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법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되, ACP 보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사내변호사 등록부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만 ACP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1단계에서 제안한 비밀성 보호는 이 등록부에 등재된 변호사에게만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서 관리 규정: 사내변호사가 작성하거나 수령한 법률 자문 관련 문서에 대해 'ACP 적용 대상 문서'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주요 목적'이 법률 자문이 아닌 다른 경영적 의사결정에 치우쳐 있을 경우 ACP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5]

결론적으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46] 따라서 한국의 맥락에 맞는 섬세하고 균형 잡힌 조건부 인정 방식과 적용 범위 설정은 기업의 준법 경영 강화와 국가 경제 경쟁력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46]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45]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⁴⁶]

제9.1.2 한국 기업 지배구조 및 규제 환경과의 조화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한국의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적 조언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성문법이 없다. 보호는 변호사의 윤리적 비밀유지의무와 증언거부권에 의존해왔으나, 이는 검찰이 형사 사건에서 관련 문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의 사고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조사관 등 비변호사가 작성한 자료도 포함할 수 있어 비밀유지특권보다 범위가 넓다 [¹⁸]. 정보의 공개는 오직 법률이 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⁴⁵]. 대신, 본 보고서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유럽의 ACP 제도는 '조건부 특권(conditional privilege)'이라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모델로 수렴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제9.2 한국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한국 사내변호사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고객 간 비밀유지권) 도입은 단순히 법률 제도의 개선을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유럽의 ACP 제도는 '조건부 특권(conditional privilege)'이라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모델로 수렴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1단계: 현황 분석 및 필요성 진단

본 단계에서는 한국 사내변호사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과 유럽 주요 국가의 ACP 도입 현황 및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ACP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 **한국 사내변호사의 실질적 고충 분석:**

- **정보 접근 및 공유의 제약:** 사내변호사가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경영진이나 실무진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부 변호사에 비해 사내 변호사는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보 공개를 꺼리는 문화가 존재한다.
- **내부 조사 및 위기 대응의 비효율성:**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률 위반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 시, 사내변호사가 확보한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수사기관이나 외부 감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위험이 상존한다. 이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내부 조사 및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선제적 법률 자문의 활성화: ACP는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시간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예방 법무'의 기능이 강화된다. 
- **해외 기업과의 법률 자문 격차:** 다국적 기업과의 거래나 분쟁 발생 시, 해외 기업의 사내변호사가 누리는 ACP와 달리 한국 기업의 사내변호사는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협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 유럽 사례와의 비교 분석: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사내변호사의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이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ACP 도입을 통해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을 내린 사례를 보여준다.  이 두 국가의 개혁은 ACP가 더 이상 순수한 법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단계: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설계

본 단계에서는 설계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ACP 도입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 한국 현행 법제 검토 및 충돌 예상 분석:

- **변호사법:** 현행 변호사법은 외부 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변호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및 비밀유지 특권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 이로 인해 사내변호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비밀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형사소송법:** 형사사건 발생 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내변호사가 보유한 자료의 법적 보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사내변호사가 기업 내부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자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가하게 된다.


• 유럽 ACP 모델의 한국적 적용 방안:

- **프랑스 모델 적용:** 프랑스는 사내변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자문가(juriste d'entreprise)'라는 별도의 직역을 두고 ACP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도 사내변호사의 전문성 및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내변호사에게 ACP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벨기에 및 네덜란드 모델 적용:** 이들 국가는 ACP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내변호사의 업무 활동 범위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내변호사의 ACP를 인정하는 명확한 법률 조항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특권의 범위, 예외 사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립성 헌장(Charter of Independence)'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ACP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외에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이나 전문 교육 이수 등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3단계: 제도 도입 준비 및 확산

본 단계에서는 설계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ACP 도입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 **법률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2단계에서 설계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추진을 가속화한다.
- **시범 사업 및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일부 기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ACP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실효성을 검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한다.
-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사내변호사 및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ACP의 중요성, 도입 효과,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ACP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는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법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4단계: ACP 제도 시행 및 운영

본 단계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제반 준비가 완료된 후 ACP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한다.

- **ACP 제도 공식 시행:** 법률 개정에 따라 사내변호사 ACP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
-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ACP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절차, 예외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ACP 제도가 기업의 법치주의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한다. 이는 결국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제10장 결론: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본 보고서는 유럽의 사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내변호사의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고객 간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유럽의 사내변호사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ACP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ACP의 논의가 전통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ACP 관리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은 법적 조인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성문법이 없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벨기에에서는 사내변호사 협회에 가입하여 그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성 보장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행위'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 두 경로의 구분은 '자격 기반' 모델이 제도는 단순하지만 변호사 협회가 사내변호사를 완전한 동등 관계로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용 관계의 부재'로 정의되는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EU, 독일, 그리고 프랑스 전반에 걸쳐 사내변호사가 일관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통일된 원리이다. 반면, 대륙법계는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변호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므로, 변호사가 직업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그 출처와 무관하게 포괄적인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 이는 의뢰인에게 특권을 주장하거나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영미법의 핵심 원리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국적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처럼 전 세계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 환경에서는,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가 궁극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권을 주장하는 관할권 중 '가장 보호 수준이 낮은' 관할권의 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특정 국가의 일반적인 국내법상 사내변호사 특권이 인정된다고 믿고 있다가도, 실제 경쟁법 조사에서는 더 엄격한 EU 기준이 적용되어 예기치 않게 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ACP는 사내변호사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시간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제적 법률 자문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예방 법무'의 기능이 강화된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통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자국 기업의 법률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될 것이다.

제10.1 사내변호사 ACP 도입의 불가피성과 필수성

전 세계적으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강력한 법리적, 정책적 논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

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ACP 관리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물론 사내변호사 ACP 인정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논리 또한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논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효과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사내변호사 ACP 도입이 불가피하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10.2 한국 법치주의 발전과 기업 법무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

유럽 각국의 사내변호사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한국의 법치주의 발전과 기업 법무 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한국의 경우, 법적 조연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성문법이 부재하다. 보호는 변호사의 윤리적 비밀유지 의무와 증언거부권에 의존해왔으나, 이는 검찰이 형사 사건에서 관련 문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형사 절차에서 사내변호사가 독립적인 변호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들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파일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내부 조사는 매우 높은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일본의 사례 역시 영미법계와 같은 일반적인 법적 조연 비밀유지권이나 증거개시 제도가 없으며, 사내 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성' 원칙은 ACP 제도의 핵심 요소로 부각된다. 이 특권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커뮤니케이션에만 적용된다. 이는 변호사에게 공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대륙법계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와 구별되는 영미법의 핵심 원리로서, 특권을 주장하거나 포기할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려되고 일상화될 때,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한국이 사내변호사 ACP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법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제10.3 향후 연구 과제 및 정책 제언

유럽 각국의 사내변호사 ACP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 연구는 한국의 ACP 도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각국의 ACP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적 조언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사내변호사의 법적 조언 비밀유지권 보호는 변호사의 윤리적 비밀유지 의무와 증언거부권에 의존해왔으나, 이는 검찰이 형사 사건에서 관련 문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내 변호사가 비밀유지 의무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고용 기간 동안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의무는 존재하지만,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며 경쟁 당국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보호가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

특히 영미법계와 같이 의뢰인이 특권의 주체인 국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예: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특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비밀유지특권은 보호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포기되며, 한번 포기되면 회복될 수 없다. 이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동의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또는 각자의 변호사와 특권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특권이 포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와 법적 쟁점들을 고려할 때,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ACP 관리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하는 맥락에서,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향후 한국에서는 이러한 유럽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내변호사 ACP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기업 지배구조 및 규제 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내변호사 ACP가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사내변호사 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한 국가가 사내변호사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단순히 법률 제도의 문제를 넘어,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ACP가 조건부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더 심각한 실무적 난제가 된다.

둘째, '독립성' 우려는 극복 가능하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독립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 자격과

함께 독립성 보장 계약 체결을 명문화하고, 법학 석사 학위 및 윤리 교육 이수 또한 독립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는 ACP가 **의뢰인과 고용 관계로 묶여 있지 않은 변호사**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전제와 연결된다.

ACP 관리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악조노쵸* 판결은 이러한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며, 사내변호사는 외부 변호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질의는 *악조노쵸* 판결 이후 수십 년 만에 CJEU가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새로운 맥락에서 재검토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독립성 현장**' **채택 의무화**와 같이 해당 사내변호사와 고용 기업이 공동으로 서명한 '독립성 현장'을 채택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정답'은 없다. 의뢰인과 고용 관계로 묶여 있지 않은 변호사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은 ACP의 남용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는 ACP 관리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색인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 특권(ACP) 도입 논의는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국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한 국가가 AC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그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와 규제에 대한 더 넓은 철학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ACP 도입은 단순한 법률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산업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결국 ACP의 부재는 기업 문화 내에 법의 지배를 내재화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법리적 순수성보다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ACP 환경은 단일한 표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각국의 법체계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건부로 특권을 인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한국의 ACP 도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CP 도입에 있어 '독립성' 우려는 극복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 취득과 함께 독립성 보장 계약 체결을 통해 이를 담보할 수 있으며, 법학 석사 학위 및 윤리 교육 이수 또한 독립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는 ACP가 **의뢰인과 고용 관계로 묶여 있지 않은 변호사**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전제와 연결된다.

ACP 관리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위기관리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악조노쵸* 판결은 이러한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며, 사내변호사는 외부 변호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질의는 *악조노쵸* 판결 이후 수십 년 만에 CJEU가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새로운 맥락에서 재검토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한 관할권의 경험은 이 제도가 기업의 행동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독립성 현장**' **채택 의무화**와 같이 해당 사내변호사와 고용 기업이 공동으로 서명한 '독립성 현장'을 채택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Concept of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round the world - DLA Piper Intelligenc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legalprivilege/insight/> [^2]: Concept of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round the world - DLA Piper Intelligenc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legalprivilege/insight/> [³]: Attorney-Client Privilege in Government and Congressional Investigations: Key Considerations and Recent Developments - American Bar Association,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americanbar.org/groups/business_law/resources/business-law-today/2019-january/attorney-client-privilege/ [⁴]: Dutch Court Rules On Legal Privilege For In-House Lawyers - Cleary Gottlieb,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clearygottlieb.com/-/media/files/alert-memos-2021/dutch-court-rules-on-legal-privilege-for-in-house-lawyers.pdf> [⁵]: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In-house Counsel, and a Global Market- Scope, Application, and Risk vary across Jurisdictions: law, policy, and a practical framework - Sigurdson Post,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www.sigurdsonpost.com/2017/08/31/legal-professional-privilege-in-house-counsel-and-a-global-market-scope-application-and-risk-vary-across-jurisdictions-law-policy-and-a-practical-framework/> [⁶]: 02 - Type of privilege | United States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north-america/united-states/topics/02---type-of-privilege> [⁷]: 02 - Type of privilege | United States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north-america/united-states/topics/02---type-of-privilege> [⁸]: SRA |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when working in-house ...,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sra.org.uk/solicitors/guidance/professional-privilege-in-house/> [⁹]: IBA Task Force on Privileg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ibanet.org/document?id=Privilege-report-Annex-2-Legal-Advice-Privilege> [¹⁰]: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In-house Counsel, and a Global Market- Scope, Application, and Risk vary across Jurisdictions: law, policy, and a practical framework - Sigurdson Post,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www.sigurdsonpost.com/2017/08/31/legal-professional-privilege-in-house-counsel-and-a-global-market-scope-application-and-risk-vary-across-jurisdictions-law-policy-and-a-practical-framework/> [¹¹]: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in Europe and Beyond - InhouseLegal, 7월 5, 2025에 액세스, <https://inhouse-legal.eu/legal-privilege/legal-professional-privilege-in-europe-and-beyond/> [¹²]: What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Really Means - SGR Law,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sgrlaw.com/ttl-articles/916/> [¹³]: 02 - Type of privilege | United States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north-america/united-states/topics/02---type-of-privilege> [¹⁴]: Attorney-client privilege - Wikipedia,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Attorney%E2%80%93client_privilege [¹⁵]: 03 - Scope of privilege | Belgium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5,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belgium/topics/03---scope-of-privilege> [¹⁶]: 02 - Type of privilege | United States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north-america/united-states/topics/02---type-of-privilege> [¹⁷]: 03 - Scope of privilege | United States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north-america/united-states/topics/03---scope-of-privilege> [¹⁸]: 02 - Type of privilege | United States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north-america/united-states/topics/02---type-of-privilege> [¹⁹]: Working Party No. 3 on Co-operation and Enforcement Treatment of legally privileged information in competition proceedings – S - OECD,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one.oecd.org/document/DAF/COMP/WP3/WD\(2018\)39/en/pdf](https://one.oecd.org/document/DAF/COMP/WP3/WD(2018)39/en/pdf) [²⁰]: Protecting your position in an investigation: a pan-European overview of privileg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twobirds.com/en/insights/2016/uk/protecting-your-position-in-an-investigation-a-pan->

[european-overview-of-privilege](#) [^21]: legal privilege global guide - DLA Piper Intelligenc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legalprivilege/insight/handbook.pdf> [^22]: 5.1. FAQ -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for In-House Counsel ...,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cba.org/resources/practice-tools/ethics-and-professional-responsibility/faq-privilege-and-confidentiality-for-in-house-counsel/> [^23]: 5.1. FAQ -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for In-House Counsel ...,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cba.org/resources/practice-tools/ethics-and-professional-responsibility/faq-privilege-and-confidentiality-for-in-house-counsel/> [^24]: Attorney-Client Privilege - Purdue University,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mediaspace.purdueglobal.edu/media/Attorney-Client+Privilege/1_ivts0v8i [^25]: Attorney-Client - Privilege Guide - Baker McKenzi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bakermckenzie.com/-/media/files/insight/guides/2022/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fourth-edition.pdf> [^26]: legal privilege global guide - DLA Piper Intelligenc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legalprivilege/insight/handbook.pdf> [^27]: legal privilege global guide - DLA Piper Intelligenc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legalprivilege/insight/handbook.pdf> [^28]: Concept of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round the world - DLA Piper Intelligenc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legalprivilege/insight/> [^29]: Concept of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round the world - DLA Piper Intelligenc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legalprivilege/insight/> [^30]: Attorney-Client - Privilege Guide - Baker McKenzi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bakermckenzie.com/-/media/files/insight/guides/2022/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fourth-edition.pdf> [^31]: 03 - Scope of privilege | United States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north-america/united-states/topics/03---scope-of-privilege> [^32]: 09 - European Union Competition Investigations | European Union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 Baker McKenzie Resource Hub,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european-union/topics/09---european-union-competition-investigations> [^33]: Privilege - European Union - Gibson Dunn, 7월 5, 2025에 액세스, <https://www.gibsondunn.com/wp-content/uploads/documents/publications/Doris-Melrose-Know-how-EU-Privilege-GIR-November-2016.pdf> [^34]: European Investigations Guide - Ellex Legal,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ellex.legal/wp-content/uploads/2021/04/european_investigations_guide_2018.pdf [^35]: Concept of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round the world - DLA Piper ..., 7월 5, 2025에 액세스,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legalprivilege/insight/> [^36]: Concept of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around the world - DLA Piper Intelligenc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legalprivilege/insight/> [^37]: Dawn raids: adapting to new challenges - Practical Law,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Document/I861b4c10f38c11ef8376a2e9ab61a315/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Document/I861b4c10f38c11ef8376a2e9ab61a315/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 [^38]: Dawn Raid Preparation and Response Checklist - Winston & Strawn,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winston.com/a/web/139569/Dawn-Raid-Preparation-and-Response-Checklist.pdf> [^39]: Dawn raids - Noerr,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noerr.com/en/topics/dawnraids> [^40]: Dawn Raid Preparation and Response Checklist - Winston & Strawn,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winston.com/a/web/139569/Dawn-Raid-Preparation-and-Response-Checklist.pdf> [^41]: Dawn Raid Preparation and Response Checklist - Winston & Strawn,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winston.com/a/web/139569/Dawn-Raid-Preparation-and-Response-Checklist.pdf> [^42]: Dawn Raid Preparation and Response Checklist - Winston & Strawn,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winston.com/a/web/139569/Dawn-Raid-Preparation-and-Response-Checklist.pdf> [^43]: Dawn Raid Preparation and Response Checklist - Winston & Strawn,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winston.com/a/web/139569/Dawn-Raid-Preparation-and-Response-Checklist.pdf> [⁴⁴]: 03 - Scope of privilege | Belgium | Global Attorney-Client Privilege Guide, 7월 5, 2025에 액세스,
<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global-attorney-client-privilege-guide/europe-middle-east--africa/belgium/topics/03---scope-of-privilege> [⁴⁵]: International Attorney-Client Privilege,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legacy.pli.edu/product_files/Titles/1695/%23237710_02_International_Corporate_Practice_P3_20180604150126.pdf [⁴⁶]: Attorney-Client Privilege Beyond Communication: The Work Product Doctrine - Baer Reed, 7월 2, 2025에 액세스, <https://baerreed.com/attorney-client-privilege-beyond-communication-the-work-product-doctrine/>